

# 노사관계이론의 비교분석

고 대 만\*

## 〈목 차〉

1. 서 론
2. J. T. Dunlop의 체계론적 접근
3. 다원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조합주의
6. 규제의 이론들
7. 전략적 선택이론
8. 결 론

## 1.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노사관계연구의 다섯 가지 이론적 접근들을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던롭(J. T. Dunlop)의 체계론적 모델, 다원주의, 마르크스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규제이론들이다. 이 접근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쟁점들에 대해 주의가 기울여질 것이다. 첫째 공공이익의 관념에 관한 것인데, 즉 제각기의 이론들이 그런 관념을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노사관계를 특징짓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대안적인 분석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것인데, 즉 국가가 독립변수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종속변수로 간주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이론이 집합적인지 아니면 분해적인지 혹은 사회기반적인지 회사기반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2. J. T. Dunlop의 체계론적 접근

던롭은 노사관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노사관계체계는 노동자 및 그들의 조직, 경영자 및 그들의 조직, 그리고 일터와 관계된 정부기관 등 세 집단의 행위자들로서 구성된다. 이 집단들은 세 개의 상호관련된 맥락…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더 큰 사회 속에서의 권력관계와 행위자들의 파생 지위…으로 구성된 특수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한다. 노사관계체계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한다. 다시 말하면 체계를 결합하는 것을 돋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할들에 관한 이념 및 신념들의 공유구조를 창출한다.<sup>1)</sup>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절차 및 규칙의 확립은 노사관계체계에서 기울여지는 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이런 규칙들의 확립과 집행은 산업사회의 노사관계 하위체계의 주요 관심사이자 산출이다.”<sup>2)</sup>

이런 접근법에 항해진 초기의 비판은 그 접근법이 구조상으로는 강력하다 할지라도 과정 및 행위자들의 동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론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이 제각기 그들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마저리슨이 지적했듯이, 규칙 및 규칙제정에 집중된 던롭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의는 그가 “갈등 자체의 본질 및 발전이라는 모든 노사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무시하며, 또 던롭에 따르면 노사관계는 노사갈등의 야기에 대해서보다는 그것의 해결에 대한 연구에 더 관심이 있다.”<sup>3)</sup>는 비난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비판들은 던롭의 행위자들에 대한 취급으로 항해졌다. … 상이한 세 행위자들은 노사관계체계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이다.

던롭은 공공이익의 관념에 대하여 묵묵부답이거나 잘해야 애매하다. 행위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관념과, 규칙 및 규칙제정에 대한 그의 촛점은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부재는 공공이익의 달성을 높일 수 없을 것임을 합축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는 공통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노사관계체계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매우 가부장적인 관을 가지며 노동자들은 경영자를 필요로 하는 직무는 없다라고 믿는 사회 속에서는, 각 행위자가 서로에게 정당한 역할

1) John T.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New York : Henry Holt, 1958), p. 383.

2) *Ibid.*, p. 13.

3) C. J. Margerison, “What Do We Mean by Industrial Relations? A Behavioural Sciences Approach,”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July 1969, p. 273.

을 제공하는 공통의 이데올로기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터 내에서의 관계는 격해지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며, 노사관계체계 내에서는 어떤 안정도 달성될 수 없을 것 같다.”<sup>4)</sup>

던롭 모델에서 국가의 역할은 빈약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그의 모델 속에 합체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 노사관계체계 내에서 국가의 관여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던롭의 분석은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으며, 또 노사관계관련 정부기관들의 작용을 감독하는 여러 상급 법원들을 배제하고 있다. 던롭은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공통의 통일된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던롭은 또 정부기관이 종속적인 제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제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모호하다. 아마, 던롭의 입장으로는, 그런 기관은 다른 두 행위자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당사자들의 명령을 따르는지, (연방정부와 같은) 외부조직의 방향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 나름의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허용되는지는 불명확하다.

던롭은 대표적인 노사관계체계의 내부적인 작용에 그 분석의 초점을 둔다. 각 체계는 특유하다는 관념은 그의 접근에 있어서 암묵적이다; 체계의 형태 및 진화는 그 나름의 외부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다. 던롭은 그래서 암묵적으로, 제각기의 노사관계체계들 간의 상호연결은 없다고 가정한다; 달리 하는 것은 그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무수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전략을 분석해야만 할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 놓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민족국가 내에서의 노사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노사관계(하위)체계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 또는 그 관계의 본질은 제각각의 노사관계(하위)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똑같이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 3. 다원주의

정치학의 다원주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애매하다. 경기장 모델은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익집단들이 서로 교묘하게 제각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겨루는 장소로서 국가를 본다. 이익집단들이 조직상의 목표추구를 강화하기 위해

4) Dunlop, *op. cit.*, p. 17.

국가 아니 오히려 국가의 그 상당한 부분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는 종속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심판자 모델은 국가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는 상호작용 규칙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 강력해진 여하한 이익집단도 그 장에 되돌아 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한다. (아마 국가가 너무 강력해진다면, 사적인 이익집단들이 그 활동을 제약할 행동을 개시한다.) 대신에, 다원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환들에 연루된 부가적인 이익집단의 집합으로서 국가의 여러 기관들을 포함하도록, 심판자 모델이 약화될 수 있다.

정치학의 다원주의는 정치체계를 무수한 작은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 혹은 하위부문들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간주하는 분해된, 사회기반적 모델을 이용한다. 이익집단들은 스스로 조직되며, 그들에게 유관한 체계의 그런 부분들에 자원을 결집하며, 또 정의상, 무관계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다. 그 모델은 체계의 여러 부분들 혹은 하위부문들간의 연결의 본질이 제한되고 약화된다고 가정한다.

정치학의 다원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은, 그것이 확립된 집단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본질을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생활의 주류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새로운 집단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또 사회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예를 들면 월프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다원주의이론은 새로운 집단 혹은 이익의 정치적 고원에의 진입권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음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이론상 그것들의 권리를 부인함으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의 존재를 무시함으로써 이렇게 한다. 그 결과는 다원주의는 사회변동에 대해 제동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제동효과는 체계에 있어서 집단 적응의 변형을 늦추지만, 변화에 대한 절대 장벽을 설치하진 않는다.”<sup>5)</sup>

이런 다원주의에 대한 정치학의 모델이 어떻게 노사관계의 연구를 위해 각색될 수 있었겠는지를 사색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자기이익을 제각각 독립적으로 (즉 특허가 준비된 체계의 그 부분을 위해) 추구하는 무수한 집단들에 초점을 두는 이 모델은 노사관계의 세계와 자연적 친화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사관계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노동조합, 고용주, 그리고 국가의 기관들간의 상호작용이 분해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서, 물론 당사자들은 자기이익의

5) R.P. Wolff, "Beyond Tolerance," in R.P. Wolff, B. Moore, Jr., and H. Marcuse, eds., *A Critique of Pure Tolerance* (London : Jonathan Cape, 1969), p. 54.

추구를 정치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경제학자들의 시장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에 진입할 수 있다. 시장을 분석 속에 명백히 합체시키는 이점은 그 분석이 정치학의 다원주의의 약점 즉 새로운 집단에 대한 접근의 부인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돋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익집단들이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카르텔에의 진입권을 획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변화들은 그들에게 증가된 이익과 수반되는 특권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 또는 부문들이 생겨날 때(그리고 오래된 것이 몰락할 때), 제각각의 조직들이 시장 속에서 그들의 효과성을 중대시킬 때(또는 감소시킬 때), 그것들은 동시에 그 고양된(혹은 위축된) 입장을 간직하는 새로운 균형을 야기한다. 시장은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노사관계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가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학의 다원주의를 노사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 문제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그 모호성이다.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독립 조직들이다라고 가정함으로써, 모호성은 시정될 것이다.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다원주의적 노사관계체계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제도들의 또 다른 집합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면, 정치학의 다원주의는 노사관계의 세계에 맞게 각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차후에 발전된 모델은 북미 정치학의 모델과의 관련이 거의 없었다.<sup>6)</sup>

#### 4. 마르크스주의

하이만(Richard Hyman)은 노사관계에 대한 유별나게 맑스주의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에서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sup>7)</sup>

6) 일부 제한된 시도들이 미국의 저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다음을 보라. Clark Kerr,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Liberal Pluralist," in Clark Kerr, *Labor and Management in Industrial Society* (New York : Anchor Books Doubleday, 1964); and Clark Kerr, J. T. Dunlop, Frederic Harbison, Charles Myers,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Ringwood : Penguin, 1973), pp. 270-7.

7) 하이만의 다른 참고문헌들은 물론이려니와, 다음을 보라. Richard Hyman, *Marxism and the Sociology of Trade Unions* (London : Pluto, 1971); Richard Hyman, *Industrial Relations: A Marxist Introduction* (London : Macmillan, 1973); and Richard Hyman, "Theory in Industrial Relations: Towards a Materialist Analysis," in P. Boreham and G. Dow, eds., *Work and Inequality: Ideology and Control in*

그는 그런 접근법 속에서 두 가지 주요 가정들을 확인했다.

첫째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생산관계는 이익들에 관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구조화된 적의를 반영하고 생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주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하며(자본주의적 노동과정은 성격상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다), 그러므로 자본 및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우선성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의 물질적 기초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노사관계로서 연구되는 것은 계급투쟁에 대한 도착된 표현(fetishized presentation)으로서 그리고 그 투쟁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약되고·분열되며, 일상화되는 여러 형태들로서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른다.<sup>8)</sup>

하이먼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는 “노사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저에, 이익들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sup>9)</sup>

계급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그 위치들로부터 생긴다 하더라도, 맑스주의 분석이 회사기반적인지 아니면 사회기반적인지는 불명확하다. 하나의 접근은 회사수준에서의 노동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sup>10)</sup>

더욱이, 기술적 변화의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분업 즉 노동계급을 분리시키는 분업에로 주의가 돌려진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의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그들 능력의 감소와 약화에로 주의가 돌려진다.<sup>11)</sup> 그와는 다르게, 계급관계의

*the Capitalist Labour Process*, Vol. 2. (South Melbourne : Macmillan, 1973). 그리고 다음을 보라. V.L. Allen, *The Sociology of Industrial Relations* (London : Longman, 1971), esp. Ch. 2. 하이먼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I. Oostermeyer, "Richard Hyman and Industrial Relations : A Radical Alternative or a Radical Dilemma?" (mimeo), Working Paper,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October 1978.

8) Hyman, "Theory in Industrial Relations," p. 42.

9) Hyman, *Industrial Relations*, p. 23.

10) 이 분야의 일부 오스트레일리아 저작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M. Bray, "Contract Labor and the Choice of Productive Techniques within a Firm :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mimeo), Paper delivered at the 52nd ANZAS Congress, Macquarie University, May 10-14, 1982.

11) J. Collins, "Fragmentation of Working Class," in E.L. Wheelwright and K. Buckley, eds., *Essay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ustralian Capitalism*, Vol. 3, (Sydney : Australia and New Zealand Book Co., 1978).

분석은 회사로부터 사회 전체로 일반화된다. 노동계급의 모든 부분들은 공동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런 공동이익들은 노동계급을 (결합된)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all-encompassing) 투쟁속에 통일시킨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사회로 일반화함에 있어서 맑스주의가 봉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회사 내에서(회사마다) 계급들 혹은 이익집단들 사이의 권력배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회사간의 갈등이 회사 내의 갈등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sup>12)</sup> 계급갈등의 존재를 가정함에 있어서, 이런 일반화된 사회기반적 맑스주의 모델은 연합형성의 가정 위에 세워진다. 그 모델은 연합들의 형성에 관하여 매우 특유하다. 연합들은 제각기의 회사 내에서 똑같은 권위위치에 속하는 계급들 또는 이익집단들에 의해 형성될 따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과 연합하며, 자본은 자본과 연합한다. 그 모델은 권위위치를 가로지르는 회사, 계급 혹은 이익집단에 의한 연합형성의 가능성을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 A의 노동자들과 자본은 회사 B의 자본과 결합하여 회사 B의 노동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으며, 또 역으로 회사 C의 노동자들과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다.

비판들은 또, 계급갈등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라는 명제에로 향해질 수 있다. 입증될 필요가 있는 것은 계급들을 갈라 놓는 그런 갈등은 혁명적 변화를 야기할 폭발적인 갈등이라는 주장이다.<sup>13)</sup> 계급들이 그들을 가르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협상을 통하여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지 않게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하다.<sup>14)</sup>

더욱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당장의 경제적 개선을 추구해 왔다. 맑스주

12) 지리상 대국에서는 지역적 차이 또한 중요할 것이다. (시와 읍, 큰 주와 작은 주) 또 토착인구들과 이주민들의 갈등, 종교적/인종적 집단, 사회에서의 남성지배 등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13) Marxism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이만은 노동조합이 혁명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또 다음의 논의를 보라. Crouch, *op. cit.*, pp. 127-38.

14) 그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Ralf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an Industrial Societ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59), pp. 124-136.

의자들은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이 허위의식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노동조합을 (레닌주의적) 숙명으로 이끌고 갈 혁명적 정당으로부터 지식인들로 노동조합의 지도력을 교체할 필요를 주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진정한 의식(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한 앎)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번거로운 이슈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노동조합의 구성원과 자생적 지도자들 모두 경제적 투쟁의 범위 밖에서부터 출현하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신비주의를 거부할 가능성에 관한 번거로운 이슈를 제기한다.<sup>15)</sup>

덧붙여서, 크로우치가 주장했듯이, “노동자들이 약간의 권력을 획득하자마자 자본은 그들에게 양보한다; 노동자들의 점증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요구와 이득의 유형이 자본주의를 전복할지도 모를 어떤 지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양보의 한계를 따른다는 결과를 가지는 양보를, 그들은 염두낸다.”<sup>16)</sup> 체계론적 접근과 다원주의에 대한 우리의 초기의 검토는 국가의 역할이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았음을 노정한다. 비교적, 맑스주의는 국가에 관해 잘 설명된 입장을 가진다.<sup>17)</sup> 엥겔스가 주장했듯이, “근대국가의 집행부는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의 문제들이 이 접근법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우선, 국가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하이만을 포함하여 맑스주의자들의 평소의 반응은 이것을 “하나의 합체정책(the policy of incorporation), 즉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사회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그래서 사회통제의 메카니즘으로서의 구실을 하는”<sup>18)</sup> 정책이라고 말한다. 국가(또는 오히려 자본)은 장기간의 지배와 통제

15) 노동운동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V.I. Lenin, “What is to Be Done?,” in Lenin on Trade Unions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0); and Selig Perlman, *A Theory of the Labor Movement* (New York : Augustus Kelly, 1949)

16) Crouch, *op. cit.*, p. 131. 또 다음에서의 논의를 보라. Colin Crouch, “The State, Capital and Liberal Democracy” in Colin Crouch, ed., *State and Economy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Croom Helm, 1979), pp. 24-36.

17) 예를 들면 다음을 보라. R.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The Analysis of the Western System of Power* (London : Quartet, 1973); B. Jessop, “Recent Theories of the Capitalist State,” December, 1977; A. Stepan,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p. 17-26.

18) Hyman, *Industrial Relations*, p. 121.

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단기간의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반응은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봉착한다. 우선, 장기간은 얼마나 긴 기간인가? 그리고 장기간이 연속되는 단기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된다면 그 관념의 효용은 무엇인가? 둘째로, 사회변동은 특정 시점에 거대하게 또 극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인가? 그 대답은 사회현실은 맑스주의보다는 정치학의 다원주의의 예견과 더 일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본은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하는 파벌들과 분파들로 이루어진다.<sup>19)</sup> 이것의 합의는 자본의 한 분파에 의해 국가로부터 얻어 낸 양보는 자본의 다른 분파들에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여태까지도 그렇게 다른 분파들을 희생시켜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세증가는 해외의 생산자들과 경쟁하는 그 자본분파(및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동시에 아마 자본의 다른 분파들에게는 투입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또 관련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 자본의 다른 분파들 사이에서 국가 선물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대답은 자본의 가장 강력한 분파들이 국가로부터의 양보를 얻어 내는 데 가장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가는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처럼 고생산성의 자원기반적 산업들에게는 분하게도 왜 오래된 구식의 자본 혹은 기계를 가진 빌버둥치는 사양산업들에게 원조 및 보호를 제공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국가는 자본 또는 이익집단의 분파들의 경쟁적 요구들 중 원조 및 보호를 받을 것은 어느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 5. 조합주의

영국과 서유럽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임금 및 소득정책의 이용은 조합주의라고 명명되는 이론적 문헌의 발달을 수반했다. 조합주의의 주요 이론적 쇄신은 국가를,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제도들과의 관련 속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앤더슨의 표현으로는, “국가는 더이상 집단 압력의 수동적인 수용체가

19) 더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D. Strinati, *Capitalism, the State and Industrial Relations* (London : Croom Helm, 1982), esp. Chap. 5

아니라 정치적 방정식에 있어서 자율적인 세력이다.”<sup>20)</sup>

문헌 내에서 보면, 조합주의가 “정치구조(a political structure)”<sup>21)</sup>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경제체계(an economic system)<sup>22)</sup>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이익대표의 체계(a system of interest representation)<sup>23)</sup>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정책형성의 제도적 유형(an institutional pattern of policy formation)<sup>24)</sup>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크로우치가 조합주의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보면, “그것은 정치-경제적 조직의 체계(a system of politico-economic organization)이다. 경제는 사적으로 소유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채로 남아 있지만, 체계의 안정은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세력들의 분리를 통하여서라기보다는 그것들의 긴밀한 통합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개인주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집합체(단체, collectivities), 조직에 속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하여 복종된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다시 또 그들을 규제한다.”<sup>25)</sup> 조합주의적 세상에서는 국가는 공공이익의 기치 하에 정치체계 혹은 경제체계의 작동에 직접 개입한다.<sup>26)</sup>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 20) C. W. Anderson, “Political Design and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April 1977, p. 129. Stepan, *op. cit.*, pp. 26-45.
- 21) L. Panitch, “The Development of Corporatism in Liber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la Studies*, April 1977, p. 66
- 22) J. T. Winkler, “Corporatism,”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January 1976, p. 103.
- 23) P. C. Schmitter,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P. C. Schmitter and G. Li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74), p. 13.
- 24) G. Lehmbruch, “Liberal Corporatism and Party Government,” *Comparativie Political Studies*, April 1977, p. 94.
- 25) Collin Crouch, *The Politics of Industrial Relations* (Glasgow : Fontana/Collins, 1979), pp. 123-4.
- 26) 밝스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자본의 요구와 동의어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을 보라. Panitch, *op. cit.*; L. Panitch, “Recent Theorization of Corporatism : Reflections on a Growth Indust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June 1980; and L. Panitch, “Trade Unions and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January-Febuary 1981. 패니취의 조합주의에 대한 저술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 Booth, “Corporatism, Capitalism and Depression in Twentith Century Brata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June 1982.

없다. 정말 그렇게 주장된다. 갈등과 경쟁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력과 합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는 직접 개입하여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가적 전진의 길을 선도한다. 조합주의는 조직들에게 국부적 이익들을 포기하여 소위 국가 전체의 필요들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이 필요들을 해석하고 정의내리며, 또 공동선을 추구함에 있어서 조직들의 활동들을 합체시켜 이용한다. (incorporates and harnesses) 국가와 자본 및 노동의 대표들은 상호작용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다. 노동과 자본의 대표들의 책임은 도달된 결정의 지혜에 관하여 제각기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또 도달된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통제자(agents of control)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헌들을 보면, 조합주의의 세 모델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슈미터는 예를 들면 사회적 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와 국가조합주의를 대비시킨다.<sup>27)</sup> 둘 간의 차이는 통제가 위에서부터 오는지 아래에서부터 오는지에 집중한다. 사회적 조합주의에서 통제는 아래로부터 행해진다. 그리고 통제는 국가의 정당성 및 기능이 단 하나의 비경쟁적인 위계적으로 질서지워진 대표 '조합들'의 능력(the ability of singular, noncompetitive, hierarchically ordered representative 'corporations')에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다른 한편 국가조합주의에서는 "정당성 및 효과적인 기능을 다른 기반들 위에 심는 그런 국가의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기관들에 의해, 유사하게 구조화된 '조합들'이 창출되고 또 역으로 그런 기관들로서 유지·존속된다."<sup>28)</sup>는 점에서 국가는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크로우치에 의해 개발된 제3의 모델은 협상중심 조합주의(bargained corporatism)로서 정의된다. 국가는 사회의 구성부분인 여러 조직들이나 이익집단들과 교섭하고 협상한다.<sup>29)</sup> 이 모델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 모델은 국가를 독립변수로 취급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국가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의 행위나 욕망으로부

27) 렘부르크는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와 권위주의적 조합주의를 구분짓는다.

28) Schmitter, *op. cit.*, p. 20.

29) 크로우치의 정의는 국가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에 초점이 있고, 자본/고용자는 무시한다. 그는 노동시장 밖의 국가로부터 자본이 획득한 양보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무관심하다. 다음을 보라. Crouch, *Politics of Industrial Relations*, pp. 188-96; and Colin Crouch, *Class Conflict and the Industrial Relations Crisis: Compromise and Corporatism in the Policies of the British State* (London : Humanities Press, 1977), pp. 262-9.

터 벗어나서 그 목표들을 추구할 순 없다. 국가가 목표들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섭하고 협상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크로우치의 협상 중심 조합주의의 관념은 정치학의 다원주의의 특별한 경우라고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명백히 국가를 분리되고 독립된 실체로서 끌어 넣는 통합된 사회기반적 모델로서 간주될 수 있다.<sup>30)</sup>

두 가지의 주요 비판이 조합주의에 향해져 왔다. 첫번째는 갈등에 대한 종결이 있을 수 있으며, 또 협력과 합의는 전능한 국가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는 가정과 관계가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이 그들을 위해 국가에 의해 정의되는 공공이익에 대한 해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이익을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다면, 국가에 의해 소망되는 조합적 합의는 순식간에 해체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갈등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국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늘 존재하는 사회생활의 특징이다. 더욱이, 국가는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용어상 모순이다. 만일 국가가 고분고분하지 않는 조직들에게 합의를 준수하도록 이끌기 위해 힘에 의지한다면, 국가는 파시스트 독일과 이태리에서처럼 역압자 내지 통제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조합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주요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조합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분석수준과 관계가 있다. 조합주의는 사회를 집단들의 덩어리로 분석한다. 그것은 국가, 자본, 노동을 언급한다. 그것이 합의하는 바는, 셋 모두 하나의 바위처럼 튼튼한 구조를 가지며(monolithic), 따라서 최정상의 대표체는 그들 제각기의 구성부분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중앙조직과 그 가입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별노조와 그 일반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다. 노조중앙조직체는 가입노조에게 명령할 입장에 있지 않고, 일반 조합원들은 노동현장 수준에 있는 고용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요구를 할 것이다.<sup>31)</sup> 유사하게, 여러 자본분파들 간의 관계 또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다. 여

30) 조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유사성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우수한 논의를 보라. R. M. Martin, "Pluralism and New Corporatism," *Political Studies*, March 1983.

31) 오스트레일리아 전국노동조합대회와 그 가입원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Braham Dabscheck, "The Internal Authority of ACTU,"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December 1977. 패니쉬는 영국의 수입정책에 대한 시도들은 현장노동자(shop floor)의 반응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anitch, "The Development of Corporatism," pp. 81-3.

러 기본분파들은 서로 계속적인 경쟁 상태에 있다; 한 사람에게 수입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용이 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단 하나의 불변적 실체가 아니다. 정부 —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연방체계에서는 정부들 — 와 사회 내의 무수한 제도들의 업무를 규제하는 여러 재판소, 법정, 그리고 법령 조직체들 사이의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6. 규제의 이론들

규제이론들은 규제기관들(regulatory bodies)과 그들이 규제하는 경제적 행위자 혹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쟁적인 두 규제 모델 대비될 수 있다. 첫째는 포획이론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사적 이익집단들에 의해 이용되고 조종만되는 그런 수동적인 도구로 간주된다. 규제의 수사가 소위 경제체계의 붕괴로부터 공공적인 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내체로 규제는 산업에 의해 획득되며, 또 주로 산업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고 작동된다.”<sup>32)</sup> 간단히 말해, 이익집단들은 자기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한다.

포획이론은 법률제정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자의 전통적인 수요/공급 틀을 이용한다. 법률들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치가들과 이익집단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선거적 성공을 제고시키려고 애쓰는 사업가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투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재정을 조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들을 공급하고 또 그런 법률을 지지한다.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과 법률을 수요한다. 그들은 일반 공중보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어서 정치가들에게 더 잘 압력을 가

32) G. J. Stigler,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또 다음을 보라. Marver H. Bernstein,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Regula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A. Posner,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4; and V. P. Goldberg, "Regulation and Administered Contracts,"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6.

할 수 있다. 규제의 편익들은 집중성이 강한 반면, 일반 공중이 받는 비용은 분산성이 강하다. 이익집단의 상급조직과 정치적 효과성은 규제가 일반공중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보증한다고 포획이론은 주장한다.

두 가지의 주요 비판이 포획이론에 가해질 수 있다. 첫째는 규제자들이 순순히 이익집단의 명령을 따른다는 가정과 관계가 있다. 포획이론은 이익집단과 정치가 사이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지만, 왜 규제자들이 하나같이 불운하고 수동적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둘째로, 포획이론은 규제받는 자들의 이익들이 균질적이라고 가정한다. 그 이익들이 상충되는 무수한 잘 조직된 이익집단들이 규제자들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규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에 이르는가? 규제자들이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그 자신의 관념을 적용시키려고 시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규제의 두 번째 모델은 느슨하게 협상이론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그것이 가정하는 바는, 규제기관들을 통괄하는 개인들이 독립적이며 또 규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나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자들은 이익집단들과 상호작용하여 소망되는 규제의 방향으로 그들을 선도하고자 한다. 규제기관의 요원은 조정적 행위(balancing act)에 전념한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이익집단들의 경쟁적 요구들을 단순히 조화시키는 것보다 더 복잡한 행위이다. 규제자들은 규제의 문제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당사자들의 기대들을 조화시킨다.<sup>33)</sup>

두 규제 모델 다 부분지향적이며 사회기반적이다. 여러 이익집단들은 그들과 관계가 있는 정치체의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며 또 그 부분에 지원들을 쏟아 부어서 그들 자신과 특히 관계가 있는 국가의 부분과 상호작용한다. 포획이론은 공공이익의 관념을 이익집단들이 자기이익추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자 애쓰는 연막으로서 간주한다. 협상이론은 공공이익의 역할에 대해 침묵한다. 아마 협상이론이 인정하게 될 것은, 이익집단, 정부, 상소법원, 일반 공중 등이 규제자들의 결정을 공공이익의 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규제자들이 기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론은 그렇지만 규

33) 오스트레일리아 노사관계 규제자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Braham Dabscheck, *Arbitrator at Work: Sir William Raymond Kelly and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Sidney: George Allen & Unwin); 이런 생각들에 대한 더 이상의 정교화는 다음을 보라. Braham Dabscheck, "New Right or Old Wrong?"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June 1980, esp. pp. 196-204.

제자들의 독립성을 주목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피규제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것과 더 관계가 있다. 두 모델 다 국가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포획이론은 국가를 이익집단들의 수동적인 봉으로 간주하는 반면, 협상 이론은 규제자들을 독립적인 실체들로서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과 이익이 사회변동의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킴에 있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 7. 전략적 선택이론

최근에 우리는 경영/고용주/자본가들의 특정 파벌 내지 분파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을 제거하거나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약화시키도록 의도된 정책을 추구하는 접근, 즉 노사관계에 대한 더욱 전투적이며, 공격적인 또는 전향적인 접근을 목격해 왔다. 특히 레이건과 대처 행정부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대답될 필요가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노사관계 이론들은 어떻게 이런 사실들에 반응할 수 있는가?

코찬, 맥커지 그리고 카펠리는 전투적인 경영층과 국가의 공격적인 반노동조합주의를 수용하거나 끌어 넣는 새로운 노사관계이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던롭의 체계론적 모델을 부활시키거나 그에 대한 수정을 함으로써 이것을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의 주요한 수정이 체계이론에 가져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첫째는 조직행동의 문헌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전략적 선택의 관념을 결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전략적 선택 또는 더 정확하게는 노사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장면(location)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코찬, 맥커지 그리고 카펠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장면들을 구별한다. 그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개인들 혹은 작업집단들로서의 노동자들과 관련된 장면들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인 작업환경과의 관계들”; 둘째, “단체교섭의 실제와 관련된 친숙한 장면들 그리고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치는 정책(personal policy)의 이해”; 셋째, “노동조합이 투자, 조합의 발언권, 신기술의 도입, 외부구매 및 하청계약에 대한 통제 그리고 새로운 공장 안에서 작업조직체계의 설계 …”

34) Thomas A. Kochan, Robert B. McKersie and Peter Cappelli, "Strategic Choice and Industrial Relations Theory," *Industrial Relations*, Winter 1984, pp. 22-3.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 그리고 시장개척, 공장입지, 부품의 생산 또는 구매 등에 관한 기업의 결정 등의 문제에 관한 결정들에 있어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수준, 즉 정부,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협회 사이의 삼자간 전국 수준의 협상들을 포함하는 “세계적 수준”.<sup>34)</sup>

고려돼야 할 최종적인 문제는 그런 사회기반적 모델들이 집합적인지 분해적인지의 여부이다. 집합적 모델의 약점은 그것이 조합주의적이든 맑스주의적이든 이미 그 모델들이 명백히 유사한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영/고용주/자본가 등이 공격적으로 반노동조합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에 관계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매우 다양하다. 유사하게, 국가의 서로 다른 기관들은 서로 다른 노사관계 목표들을 가진다. 그리고 서로 다른 노동조합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경영/고용주/자본가 및 국가의 제각기의 분파들에 의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

분해적인 사회기반적 모델은 노사관계 현상이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무수한 방법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 현실 세계의 노사관계의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및 하위 체계들 내에서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전개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무수한 상호연결 또는 상호관계를 수용할 수 있다.

## 8. 결 론

여러 조직들이 공공이익의 가면 아래 제자신들을 위한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이익이란 노사관계와 관련된 수사의 일부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것은 분석적인 이점을 갖지 못한다. 정치학의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가 드러냈듯이, 제각각 그 나름의 이익을 가진 많은 공중들이 있다. 더욱이, 그리고 정치학의 다원주의와 구별해서 체계작동의 지속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정을 하는 모델의 문제는 그 모델은 왜 하나의 특수 체계가 변화하고 해체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또는 서로 다른 체계에 의해 대체되는지에 대한 흥미있는 분석적 질문들을 조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조사를 못하는 것이 확고하게 견지된 이데올로기적 입장 때문인지, 아니면 변화된 사건 또는 상황이 더 이상 “확립된” 이론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인지를 연구해

야 한다.

조합주의와 규제의 협상모델에 따르면, 국가는 독립변수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분석상 독특한,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목표들과 구별되는 그 나름의 목표들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 속의 다른 제도들처럼 진공상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갈등적 투쟁 속에 연루되기도 한다. 더욱이, 국가를 집합적인, 단일주적 형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많은 다른 부분들고 구성되는데, 그 부분들 모두는 그들 나름의 목표들을 가진다. 또 전략적 이론에서도 국가는 독립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분해된 사회기반적 노사관계 모델이 이용되어야 한다. 회사기반적 모델(폭스)이 가지는 문제는 그것들이 사회 전체에 적용될 때 붕괴한다는 것이다. 조직들을 거대한 덩어리로 집합하고 결합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조합주의와 맑스주의의 약점은 소위 유사한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체계는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모든 조직들로 구성된다: 활동 수준이 다른 여러 조합들, 자본의 소유자 및 그들의 여러 대표체들, 그리고 무수하고 다양한 국가기관들. 노사관계의 연구는 이런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전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조직들 모두는 제나름의 목적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함에 있어서 조직들은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그리고 체계 내의 변화의 원인은 바로 이런 갈등이다. 어떤 제도 또는 체계의 부분의 역할은 전체체계, 또는 체계의 다른 제도들 또는 부분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하겠다.

정치학의 다원주의에서 이익의 다원성의 개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조합주의와 규제이론에서의 협상론에서 우리는 국가의 자율성의 관념을 획득할 수 있고, 정치학의 다원주의 및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분해된 사회기반적 모델의 틀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마르크스주의에서 노사관계의 본질인 힘, 갈등 그리고 경쟁의 개념을 얻을 수 있고,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노사간 대립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이론들에서 획득한 개념 혹은 관념 혹은 시각들에다 흐름에 대한 전면적 조망을 가능케 하는 체계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노사관계체계의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Allen, V. L., *The Sociology of Industrial Relations* (London : Longman, 1971)
- Anderson, C. W., "Political Design and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April 1977
- Bernstein, M. H.,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Regula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 Booth, A., "Corporatism, Capitalism and Depression in Twentieth Century Britai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June 1982.
- Bray, M., "Contract Labor and the Choice of Productive Techniques within a Firm: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mimeo), Paper delivered at the 52nd ANZAS Congress, Macquarie University, May 10-14, 1982.
- Collins, J., "Fragmentation of Working Class," in E.L. Wheelright and K. Buckley, eds., *Essay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ustralia Capitalism*, Vol. 3, (Sydney : Australia and New Zealand Book Co., 1978).
- Crouch, C., *The Politics of Industrial Relations* (Glasgow : Fontana/Collins, 1979) Crouch, C., "The State, Capital and Liberal Democracy" in Colin Crouch, ed., *State and Economy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Croom Helm, 1979)
- Crouch, C., *Class Conflict and the Industrial Relations Crisis: Compromise and Corporatism in the Policies of the British State* (London : Humanities Press, 1977)
- Dabscheck, B., *Arbitrator at Work: Sir William Raymond Kelly and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Sidney : George Allen & Unwin)
- Dabscheck, B., "New Right or Old Wrong?"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June 1980
- Dabscheck, B., "The Internal Authority of ACTU,"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December 1977.

- Darh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an Industrial Societ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59)
- Dunlop, J. T.,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New York : Henry Holt, 1958)
- Goldberg, V. P., "Regulation and Administered Contracts,"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6.
- Hyman, R., *Marxism and the Sociology of Trade Unions* (London : Pluto, 1971)
- Hyman, R., *Industrial Relations: A Marxist Introduction* (London : Macmillan, 1973)
- Hyman, R., "Theory in Industrial Relations : Towards a Materialist Analysis," in P. Boreham and G. Dow, eds., *Work and Inequality: Ideology and Control in the Capitalist Labour Process*, Vol. 2. (South Melbourne : Macmillan, 1973).
- Kerr, C.,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Liberal Pluralist," in Clark Kerr, *Labor and Management in Industrial Society* (New York : Anchor Books Doubleday, 1964)
- Kerr, C., Dunlop, J. T., Harbison, F., Myers, C.,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Ringwood : Penguin, 1973)
- Kochan, T. A., McKersie, R. B. and Cappelli, P., "Strategic Choice and Industrial Relations Theory," *Industrial Relations*, Winter 1984
- Lehmbruch, G., "Liberal Corporatism and Party Governmen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April 1977
- Lenin, V. I., "What is to Be Done?," in Lenin on Trade Unions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0)
- Margerison, C. J., "What Do We Mean by Industrial Relations? A Behavioural Sciences Approach,"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July 1969.
- Martin, R. M., "Pluralism and New Corporatism," *Political Studies*, March 1983.
- Miliband, R.,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The Analysis of the Western System of Power* (London : Quartet, 1973)

- Oostermeyer, I., "Richard Hyman and Industrial Relations: A Radical Alternative or a Radical Dilemma?" (mimeo), Working Paper,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October 1978.
- Panitch, L., "Recent Theorization of Corporatism: Reflections on a Growth Indust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June 1980
- Panitch, L., "Trade Unions and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January-February 1981.
- Panitch, L., "The Development of Corporatism in Liber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April 1977
- Perlman, S., *A Theory of the Labor Movement* (New York: Augustus Kelly, 1949)
- Posner, A.,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umn 1974
-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P. C. Schmitter and G. Lihmbruc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4)
- Stepan, A.,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Stigler, G.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 Strinati, D., *Capitalism, the State and Industrial Relations* (London: Croom Helm, 1982)
- Winkler, J. T., "Corporatism,"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January 1976
- Wolff, R. P., "Beyond Tolerance," in R.P. Wolff, B. Moore, Jr., and H. Marcuse, eds., *A Critique of Pure Tolerance* (London: Jonathan Cape, 1969)